BOK 이슈노트

가구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

장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
Tel. 02-759-5188
janghun@bok.or.kr

이인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실장
Tel. 02-759-5404
einro@bok.or.kr

장진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조사역
Tel. 02-759-5486
jjs@bok.or.kr

이윤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가계부채미시통계팀 과장
Tel. 02-759-5348
yunha@bok.or.kr

박기란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가계부채미시통계팀 조사역
Tel. 02-759-4436
gilan_park@bok.or.kr

2026년 9월 7일

1 **본고는 기존에 '개인' 단위로 주로 이루어지던 가계부채 분석을 '가구' 단위로 확장한 DB를 새로 구축하여(이하 가구DB), 가계부채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이는 저축하거나 차입을 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통상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용위험 역시 가구 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2 **가구DB는 KCB 신용정보 자료를 기초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구를 식별하여 구축하였다.** 가구별 부채 · 자산 · 소득 · 지출 정보를 월별로 추적할 수 있는 패널자료이며, 총 206만 가구로 구성되어 모집단의 9.2%를 포괄하는 대규모 표본이다. 검증 결과, 가구DB는 모집단 규모와 지역별 분포뿐 아니라 표본의 지역별 분포도 인구총조사와 매우 유사하여 대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가구DB는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배우자 등의 소득과 자산, 부채를 함께 반영함으로써 가구의 신용위험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실제로 가구주가 연체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의 연체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 내에서 신용위험이 공유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부채의 부실가능성 분석에 있어 가구 단위 접근이 더욱 현실에 부합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재무건전성 지표(LTI, LTV 등)를 소득분위별로 비교한 결과, 개인과 가구 단위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였으며, 가구 단위로 볼 때 가구원 전체의 재무상황을 반영하여 가계신용의 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구DB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차입 가구 전체로 보면 금리상승 시에도 연체비율은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가겠으나, 일부 차입이 많은 가구의 경우 큰 폭의 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고차입 주택취득가구」가 금리 충격에 취약하며 가구원 간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차입 주택취득

가구」란 주택 구입시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폭(△원리금/소득)이 가장 컸던 상위 10% 가구를 의미하는데,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이들 가구의 연체확률은 0.81%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말 旣주택보유가구의 실제 연체비율 2.01%와 비교할 때 상당한 증가폭이다. 또한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에서 한 명이 연체할 경우 12개월 이내 다른 가구원이 연체할 확률은 8.8%로 기존 주택보유가구(4.6%)의 1.9배 수준이었다. 이는 고차입 가구의 경우 금리 상승시의 신용위험이 차주 개인을 넘어 가구원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5 **한편 부채보유가구의 11.1%가 채무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025년 기준).** 통상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DSR)이 높아질수록 소비는 점차 둔화되다가, DSR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소비함수 추정 결과, 이러한 전환이 나타나는 DSR 임계점은 46%로 확인되었다. 2025년 기준 부채 보유 가구 중 DSR이 46%를 초과한 가구는 11.1%였다. 이러한 가구의 비중은 2021년 이후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층(소득 1분위)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2021년중 11.4% → 2025년중 14.5%).

6 **이상의 분석 결과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평가 · 관리하는 데 있어 가구 단위 정보를 활용하면 리스크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에 있어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의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위험과 가구원 간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저소득가구의 높은 채무상환부담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가구DB 등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계의 신용위험을 보다 다각도로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은행 이지호 부총재보님, 경제연구원 이재원 원장님(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나승호 부원장님,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님 및 경제통계1국 김영환 국장님, 유성욱 금융통계부장님, 민숙홍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간현안포럼 및 경제연구원 세미나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남아있는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한국은행

Ⅰ. 논의배경

1. 가구는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이자, 구성원의 소득과 부채가 서로의 차입 · 상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 연계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구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적용되는 기본 단위이기도 하다.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단위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며, 세대당 규제지역내 보유 주택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대출 규제나 양도소득세 등 세율도 달리 적용된다(표 1). 따라서 정책효과나 가계부채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고려해야 한다.

2. 그러나 기존의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는 주로 개인(차주) 단위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가구 전체의 부채 규모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포착하는 데 제약이 있다. 가구 단위 자료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활용되고 있지만, 연 1회 실시되는 면접조사라는 특성상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이 어렵고, 상세 연체 정보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3. 이에 본고에서는 가구 단위의 가계부채 DB를 구축하여(이하 '가구DB') 관련 리스크를 심층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정보DB를 활용하여 월별로 가구의 부채, 소득, 자산 및 지출을 포함하는 DB를 구성하여 가계부채 리스크를 평가한다.

[표 1] 부동산 관련 정책 가구단위 적용 내용

관련 정책	주요 내용
2017.6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조정대상지역 확대(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지역, 세종시)
2017.8월(주택시장 안정대책)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과천시, 세종시) 및 투기지역(서울 11개 지역, 세종시) 지정
2018.9월(주택시장 안정대책)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2019.12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주택 **세대**의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1년내 전입 및 처분의무 부여
2020.7월(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서민 ·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로 완화
2022.6월(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생애최초 주택구매 LTV 우대 적용 요건(**부부합산** 소득 1억미만)을 폐지
현행 DSR 규제 적용 시 소득요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제3장 12-1항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총 금융부채에도 **배우자 명의의 금융부채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II. 가구DB 설계 및 형태

4. 가구DB는 가구의 부채 · 자산 · 소득 · 지출 정보로 구성된 월 주기 패널 자료로서 개인 및 가구 단위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 수록 정보는 신용평가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천정보에 기반하고 있어 정확도가 높다. 세부적으로 부채는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가계대출 기준이며, 소득은 금융기관에 제출된 증빙소득에 기반하여 추정한 정보이다. 또한 주택자산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지출은 신용카드사 정보가 각각 활용되었다.

5. 가구DB는 약 206만 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표본으로, 2025년 말 기준 KCB 가구모집단의 약 9.2%를 포괄한다(표 2). 동일 가구 여부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식별하였다. 미국 뉴욕 연준(FRBNY) 소비자신용패널(Consumer Credit Panel, CCP)[1]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벤치마크하여 신용평가사 DB에서 무작위 샘플을 뽑은 후 주소지를 기반으로 가구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같은 방식은 표본의 무작위성(randomness)을 확보하면서도, 표본유지율이 95% 이상으로 높아 패널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표본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신용활동인구 중에서 18세 미만이거나 100세를 초과하는 연령층,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집단 거주지 거주자를 제외하였다. 이후 생년월일 6자리에 난수화기법을 적용하여 약 214만 개인을 랜덤 추출하고, 이 중 동일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추출된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약 206만 가구를 표본[2]으로 확정하였다.

신용활동인구를 기반으로 주소지가 명확한 개인을 랜덤 추출하여 가구DB를 구성

[표 2] 가구DB 모집단과 표본

내 · 외국인 거주자(5,411만명)						
주소지 분류 불가	주소지가 명확한 신용활동인구		집단 거주지	비신용활동인구 (18세 미만, 100세 초과)	KCB 가구 모집단	
	(가구DB 개인 모집단)	가구DB 개인 표본				가구DB 가구 표본
232만명 (4.6%)	**4,368만명 (85.7%)**	**214만명 [4.9%]**	355만명 (7.0%)	139만명 (2.7%)	**2,229만 가구**	**206만 가구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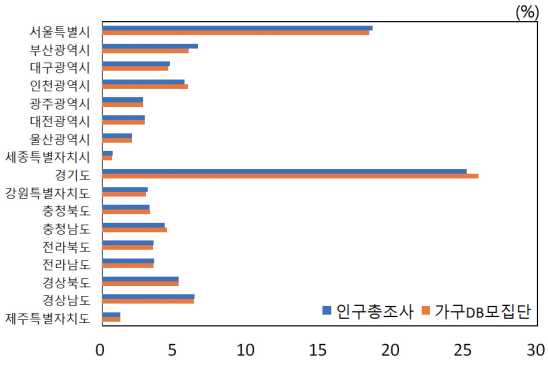
주 : ( )내는 비중, [ ]내는 표본비율
자료 : KCB 신용등급DB(2025.12월말 기준)

1) CCP는 FRBNY가 신용평가사 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부채와 신용정보를 구축한 패널 DB이다. 개인의 사회보장번호(SSN) 끝자리가 특정 숫자인 경우를 추출하여 표본으로 구성하고, 동일 주소지 개인 정보를 결합하여 가구 단위 표본도 구성하고 있다. FRBNY는 이를 바탕으로 1999년 1분기 이후 다양한 측면의 개인 부채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2) 표본으로 추출된 약 214만 개인 중에서 동일 가구에서 추출된 약 8만명을 제외하여 산출한 총 가구수는 약 206만 가구이다.

6. 가구DB는 ① 모집단의 규모와 ② 지역별 분포, ③ 표본의 지역별 분포가 인구총조사와 매우 유사하여 높은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 모집단 규모에 있어 가구DB는 인구총조사 일반가구수의 98.8% 수준으로 나타났다.[3),4)] (ii)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를 보더라도, 가구DB와 인구총조사의 17개 시도별 가구 비중 차이가 모두 1%p 이내로 매우 유사하였다(그림 1). (iii) 표본에서도, 가구DB 표본과 인구총조사 일반가구의 지역별 분포 차이가 모두 2%p 이내로, 표본 수준에서도 높은 대표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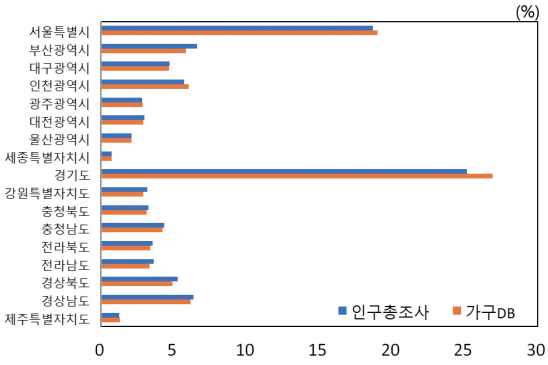
가구DB 모집단과 표본 모두 인구총조사와 지역별 분포가 유사

[그림 1] 가구DB 모집단과 인구총조사 일반가구의 지역별 가구 분포



자료: 가구DB, 국가데이터처

[그림 2] 가구DB 표본과 인구총조사 일반가구의 지역별 가구 분포



자료: 가구DB, 국가데이터처

3) 다만 신용DB는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신용활동을 하는 인구를 일정기간 누적하고 있어 특정 시점에 국내 거주 중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총조사와 차이가 있다. 2024년 기준 인구총조사 총인구(20세 이상 및 100세 미만 기준)는 4,409.8만명이며 KCB 신용정보DB상의 18세 이상 신용활동인구는 약 4,900만명 수준이다.

4) 2024년 기준 인구총조사 일반가구수는 2,229만개이며, 가구DB 모집단 가구수는 2,203만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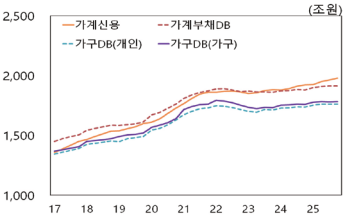
BOX 1 가구DB와 관련 가계부채통계와의 비교

가계대출 규모와 추이 면에서 가구DB는 기존 가계부채 통계와 대체로 유사하여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 가구DB로 추정한 가계대출 총액은 가계신용통계 상 가계대출 총액의 약 95% 수준이다(그림 3).[5]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두 통계의 포괄범위[6]와 집계방식[7]이 다른 데 기인한다. 개인 단위 표본인 '가계부채DB'와 비교하면, 가구DB의 총액은 가계부채DB의 약 92% 수준으로 다소 낮지만 이는 가구DB의 표본설계 특성[8]에 따른 것이며, 시계열 추이는 매우 유사하다(그림 3).

또한 가구DB의 개인 단위와 가구 단위로 각각 추정한 대출 총액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그림 3) 개인과 가구간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9]하였다. 특히 가구DB 내 부채보유개인 평균부채는 차주별 가계부채통계와 거의 일치하였다. 한편 가구DB 내 부채보유가구 평균부채는 개인보다 높았으며, 이는 가구원이 1명 이상임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과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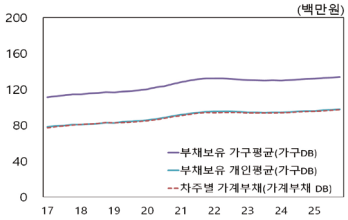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구DB는 부채의 포괄범위가 상이하나, 부채보유가구의 평균대출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가구DB의 부채보유가구 비중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DB 내 비신용활동인구로 구성된 가구가 제외되고 주소지가 명확한 경우만 포함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가구는 주소지가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표본 선택의 특성이 부채보유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

[그림 3] 가구DB, 가계부채DB와 가계신용통계 총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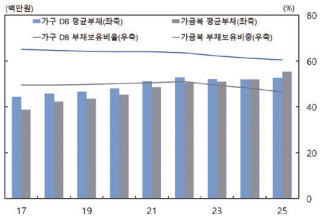
자료: ECOS, 가계부채DB, 가구DB(자체 시산)

[그림 4] 가구DB와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비교



자료: ECOS, 가계부채DB, 가구DB(자체 시산)

[그림 5] 가구DB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DB(자체 시산)

한편 가구DB는 가구 및 개인 단위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며, 월별 분석이 가능하고, 부채액 등 주요 정보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표 3] 가구DB 기존 개인 · 가구 데이터와 비교

	단위	규모	주기	자료수집방법	비고(소득 · 부채액 등의 출처)
가구DB(KCB DB)	가구(거주지 단위)	206만	월	KCB 신용DB, 신용정보원	금융기관 제출자료, 행정자료, 상세 신용정보 및 신평사 추정자료
	개인	214만			
가계부채DB(NICE DB)	개인	235만	분기	NICE 신용DB, 신용정보원	금융기관 제출자료, 행정자료, 신용정보 및 신평사 추정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생계 단위)	2만	연	설문조사	응답자 보고

5) 2017년~2025년 기간 평균
6) 가계신용통계는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신용공여를 포함하며 가구DB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2023년 이후 기타금융중개회사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가계신용과 가구DB 총액과의 차이가 다소 확대되었다.
7) 한도대출을 집계할 때 가구DB는 한도액을, 가계신용통계는 실제 사용잔액을 사용한다.
8) 가구DB는 설계 특성상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와 집단거주지 거주자는 제외하여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11.6%(2025년말 기준 추정)를 제외시킨다. 가구DB 기반 총액은 가계부채DB 기반 총액과 흐름은 일치하지만 수준은 약 92%로 낮다. 그러나 금융기관 대출 보유자는 주소지가 명확할 가능성이 높아 가구 혹은 개인 단위 부채 미시 분석 결과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9) 가구 단위의 부채 총액 산출시에는 가구 표본의 추출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였다. 이는 개인 기반으로 표본을 추출하므로 어떤 가구에 가구원이 많을수록 해당 가구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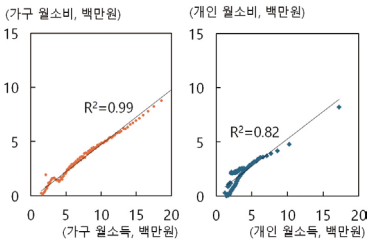
Ⅲ. 가구 vs. 개인 단위 지표의 비교와 주요 특징

본 장에서는 가구DB를 바탕으로 소득-소비의 관계 및 LTI(Loan-to-Income Ratio, 소득 대비 부채비율), LTV(Loan-to-Value Ratio, 주택자산[10] 대비 부채비율), 연체율 등 주요 지표를 개인과 가구 단위로 각각 산출 · 비교하고, 분석 단위에 따른 주요 특징과 차이를 살펴본다.

7. 소득-소비 간 연관성은 개인 단위로 볼 때보다 가구 단위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출도 가구 내에서 분산 · 공유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구 단위 분석의 중요성을 뒷받침하였다. 먼저 소득-소비 간 연관성은 개인 단위로 볼때보다 가구 단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6). 이는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소득이, 소득이 없는 가구원의 소비에도 활용되는 등 가구 내에서 소득이 공유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출 역시 가구 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보다 여러 구성원에게 분산 · 공유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7). 대출을 보유한 가구원이 한 명에 그치지 않는 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2인 및 3인 가구에서 각각 49.8%, 66.2%가 둘 이상의 가구원이 동시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금의 공유는 대출 발생 시점의 구조에서도 확인되었다. 2인 가구 중 가구원이 대출을 보유한 가구를 보면, 최초 대출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다른 가구원의 추가 대출이 발생한 비중이 46.5%에 달하는 등 추가 차입의 상당 부분이 최초 대출 직후 단기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소득-소비 간 연관성은 가구단위에서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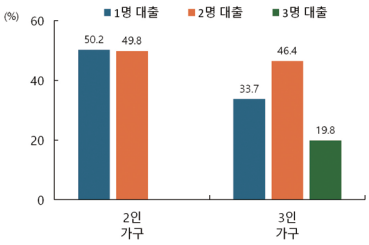
[그림 6] 개인 · 가구의 소득과 소비



주: 1) 2025.12월 기준
2) 소비는 카드소비액
3) 100개 그룹화 평균치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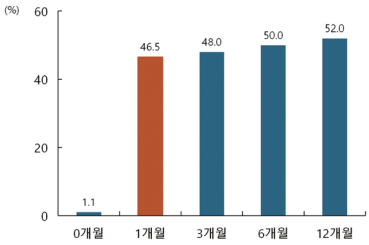
다수의 가구원이 대출을 나누어 보유하는 경우가 빈번

[그림 7] 가구별 대출 보유 현황



주: 1) 대출 잔액 기준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그림 8] 최초 대출 이후 타 가구원의 추가 대출 시차



주: 1) 2인 가구 기준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10) 주택자산 변수에는 개인 또는 가구가 소유한 주택가격을 시세 추정하여 반영하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소유주택 전세 시세를 차감한 값을 반영하였다. 또한 거주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 시세를 주택 자산으로 합산하여 추정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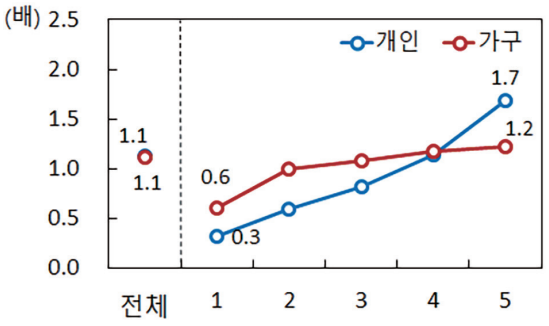
8. 개인과 가구의 LTI · LTV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득계층별로는 상이한 양상을 보여 분석 단위에 따라 부채 리스크 평가 결과가 달라졌다. 가구원 전체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가구 단위로 보면, 저소득층의 부채부담은 개인 단위로 파악할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반면 고소득층은 오히려 가구 단위 부채부담이 더 낮았다.

- 가구와 개인의 전체 LTI는 2019~2025년 평균 1.1로 동일했지만, 소득분위별로는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그림 9). 개인은 소득이 높을수록 LTI가 상승한 반면, 가구는 소득이 늘어도 LTI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개인의 소득과 부채만으로 LTI를 산출할 때와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부채를 함께 고려할 때 부채부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부채를 보유한 개인과 가구만을 대상으로 보면, 개인과 가구의 LTI 차이가 더욱 컸다(그림 10). 부채보유 개인의 LTI는 2.1인 반면 부채보유 가구는 1.5로 가구 단위에서 부채부담이 더 낮게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개인은 소득이 높을수록 LTI가 높아지는 반면, 가구는 소득이 높을수록 LTI가 오히려 낮아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저소득(1,2분위)에서는 가구의 LTI가 개인보다 높아, 저소득층의 부채부담은 가구 단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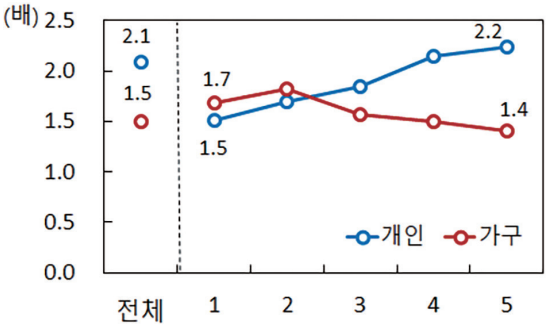
개인과 가구의 LTI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나, 소득계층별로는 상이함

[그림 9] 개인 · 가구의 소득분위[2]별 LTI



주: 1) 2019~2025년 기간 전체
2) 전체 개인/가구 대상 소득분위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그림 10] 부채보유 개인 · 가구의 소득분위[2]별 L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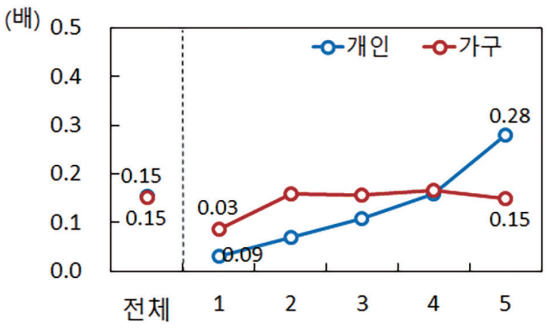
주: 1) 2019~2025년 기간 전체
2) 전체 개인/가구 대상 소득분위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 LTV 역시 전체 개인과 가구의 수치는 비슷하지만, 소득분위별 움직임은 달랐다(그림11). 가구와 개인의 전체 LTV는 2019~2025년 평균 0.15로 동일했지만, 소득분위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개인은 소득이 높을수록 LTV가 상승한 반면, 가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LTV는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였다. 특히, 5분위에서는 개인의 LTV가 0.28로 5분위 가구(0.15)의 약 2배에 달해, 고소득층에서 개인과 가구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 부채를 보유한 개인과 가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그림 12). 부채보유 개인의 LTV는 0.32인 반면 가구는 0.21로, 가구 단위에서 부채 부담이 더 낮았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개인은 소득이 높을수록 LTV가 높아진 반면, 가구는 소득이 높을수록 LTV가 낮아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저소득(1 · 2분위)에서는 가구의 LTV가 개인보다 높아,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은 가구 단위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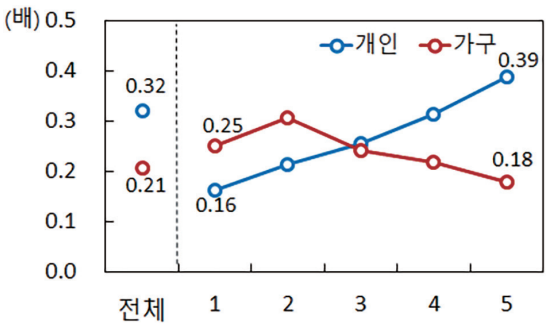
개인과 가구의 LTV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나, 소득계층별로는 상이함

[그림 11] 개인 · 가구의 소득분위[2]별 LTV



주: 1) 2019~2025년 기간 전체
2) 전체 개인/가구 대상 소득분위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그림 12] 부채보유 개인 · 가구의 소득분위[2]별 L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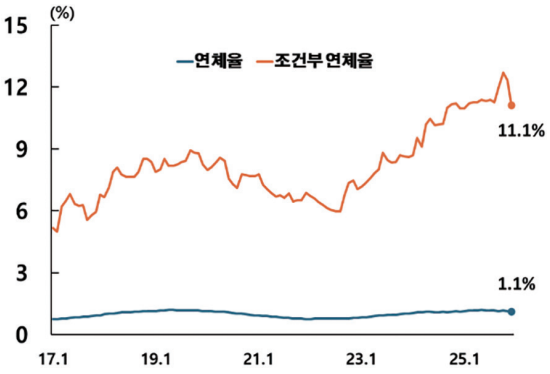
주: 1) 2019~2025년 기간 전체
2) 전체 개인/가구 대상 소득분위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9. 이와 같이 소득분위별로 개인과 가구의 부채 리스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개인 단위 데이터만으로 분석할 경우 소득계층별 부채 리스크를 다르게 평가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저소득층의 위험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의 분석 결과는 가구 구성원 간 소득과 부채를 공유하고 있어 가구 단위로 부채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가구단위로 묶어서 본 장에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부채부담(LTI, LTV)이 개인 단위보다 높았다. 이는 향후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나 규제 설계 시에도 가구 단위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10. 실제 연체율(금액기준)을 통해 확인한 신용위험에서도 가구 구성원 간 연계성이 높게 나타나, 가구 단위로 신용위험을 파악할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가구주[11]가 연체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의 연체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원의 신용점수 또한 가구주의 연체 6개월 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특징이 있었다. 2019~2025년중 전체 연체율은 1%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반면, 가구주가 연체 중인 가구에서 다른 가구원의 조건부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을 큰 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예컨대 25.12월 기준 전체 연체율은 1.1%였으나, 조건부 연체율은 11.1%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구주 연체 전후 가구원의 신용점수 변화를 사건연구(event study)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연체가구는 가구원의 신용점수가 가구주와 동반하여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14). 연체가구 가구주의 신용점수 지수(연체 12개월 전=100 기준)는 12개월 전부터 완만하게 하락하다 6개월 전부터 급격히 낮아져 연체 발생 시점에는 32, 12개월 후에는 4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정상가구 가구주의 지수는 101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다. 가구원의 경우에도 연체가구는 지수가 93.0 내외로 낮아진 반면, 정상가구는 101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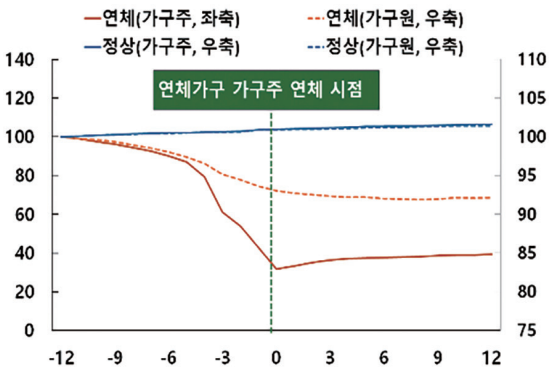
가구주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가구원의 신용위험도 동반하여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13] 전체 연체율과 조건부 연체율(금액 기준)



주: 1) 조건부 연체율은 가구주 연체시 가구원 연체 기준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그림 14] 가구주 · 가구원 연체발생 전후 신용점수



주: 1) 정상가구는 가구주의 연체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가구
2) 신용점수는 연체 발생 12개월 전 100으로 표준화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11. 이상의 분석 결과는 가계의 부실위험 등 금융안정 관련 연구나 가계소비 변동요인, 통화정책 효과 등 경기변동 관련 연구 시 개인보다는 가구 단위의 부채분석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1) 가구주는 가구DB 내에서 가구구성원 중 ① 소득(고소득), ② 연령(고연령), ③ 성별(남성)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Ⅳ. 가구DB를 활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12. 본 장에서는 가구DB를 활용하여 가구 재무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금리 충격 시 가구의 연체위험과 가구원 간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을 분석한다. 연체위험은 가구의 단기 상환여력(liquidity risk)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및 지급능력(solvency risk)을 나타내는 주택가치 대비 부채잔액 비율(Loan-to-Value Ratio, 이하 LTV) 등 가구 재무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표 4)에서도 두 지표와 연체 발생 간의 관계를 이용해 부실위험을 예측하였으며, DSR과 LTV가 상승할수록 부실위험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가구 재무건전성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고, 연체위험을 스트레스 테스트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체위험 분석지표로는 부채보유 가구 중 연체 계좌를 보유한 가구의 비중인 '연체비율'을 활용하였다. 이는 연체 금액을 전체 부채 잔액으로 나눈 금액기준 연체율과는 차이가 있다. 연체가구의 분류 기준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의 30일 이상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로 설정하였다.

[표 4] 가계부채 연체 관련 선행연구

저자 (발행연도)	분석대상	주요 내용
Gerardi et al. (2018, RFS)	• 주담대 보유 가구(미국, PSID)	• 지불능력 부족이 주담대 채무 불이행의 직접적인 요인임
Kelly & O'Toole (2018, JFS)	• 임대수익 목적 주담대 보유 대출계좌 (영국/아일랜드, BOI DB)	• 수익형 부동산 주담대의 사후적 채무불이행 확률은 LTV와 DSR이 커질수록 상승
O'Toole & Slaymaker (2021, JBF)	• 주담대 보유 가구(아일랜드, SILC)	• DSR의 악화는 가계부채 부도확률을 높이나, LTV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함
Barbaglia et al. (2023, JFEC)	• 주거용 부동산 구매 목적 대출 계좌 (유럽 7개국, Euro.Datawarehouse)	• LTV, 이자율, 지역경제 상황이 가장 중요한 가계부채 부도 결정요인
Low (2026, REStat)	• 주담대 보유 차주(미국, 행정자료)	• 주담대 연체는 실직 · 예상치 못한 지출(eg., 의료비) 급증 등에 주로 기인
김영일 · 유주희 (2013, 경제분석)	• 부채보유가구(한국,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득 · 주택가격 · 금리 충격 발생 시 하위소득가구의 부실위험이 크며,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기관 손실규모 증가
정호성 (2018, BOK 경제연구)	• 부채보유차주(한국, 가계부채DB)	• 자영업 차주의 금리 취약성이 비자영업에 비해 높음
김영일 (2023, 한국경제포럼)	• 부채보유차주(한국, NICE평가정보DB)	• DSR이 높을수록 차주의 연체확률은 상승하나, 400%이상 高LTI 차주의 경우 연체확률이 오히려 하락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3)	• 부채보유차주(한국, 가계부채DB)	• 가계 이자부담비율과 4분기 후 연체율 간 시차상관계수는 0.91

13. 본고는 대규모의 가구 단위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연체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기존 연구(표 4)의 상당수는 개인(차주) 단위 신용정보에 기반하고 있어, 가구원 전체의 상환능력과 신용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본문 Ⅲ장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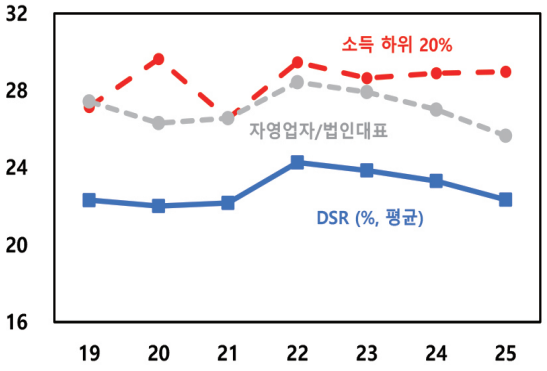
기존의 가구 단위 분석은 주로 서베이 자료에 의존해 왔는데, 이 경우 부채 등에 대한 자기보고 과정에서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Meriküll and Rõõm, 2020), 표본 규모와 조사주기 측면에서도 시의성 있고 정밀한 분석에 제약이 있다.

(가구 단위 재무건전성 및 연체 현황)

14. 가구단위의 평균 재무건전성(DSR · LTV)은 대체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부동산시장 규제,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점진적으로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5). 다만 저소득층 및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 법인대표 가구의 DSR이 높게 나타났으며, LTV는 비수도권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평균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들 가구의 상환능력과 담보여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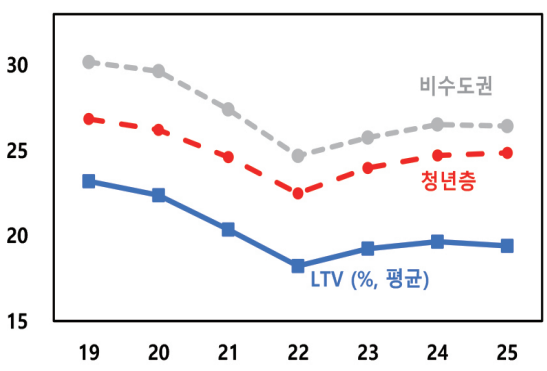
전반적인 부채 비율은 하락세

[그림 15] DSR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그림 16] L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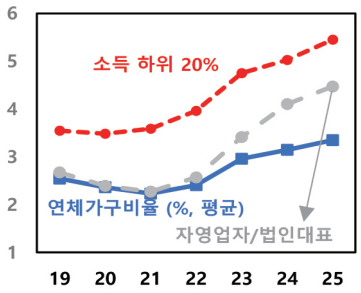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15. 반면 연체비율은 2021년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하여 DSR 및 LTV개선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그림 17).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무여건이 취약한 가구의 연체위험은 여전히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평균적인 재무건전성 지표 이면의 가구별 세부 분포를 살펴보면, DSR 및 LTV가 높은 가구일수록 연체비율도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8, 19). 이는 평균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의 개선만으로는 취약가구에 집중된 연체위험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체는 파산 등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되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만큼(Athreya et al., 2018; Stanga et al., 2020)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연체비율은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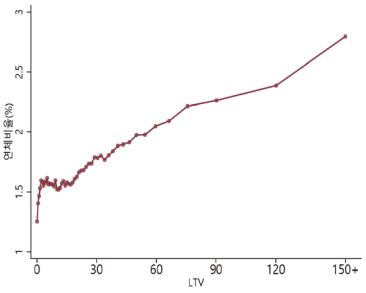
[그림 17] 연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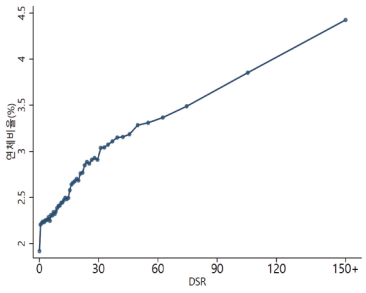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가구 재무건전성이 하락할수록 연체 가능성도 상승

[그림 18] LTV 및 연체비율



[그림 19] DSR 및 연체비율



주: 2019년 이후 부채보유가구를 DSR 및 LTV 수준에 따라 각각 5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연체비율을 나타내었다. 단, DSR 및 LTV가 150% 이상인 관측치는 하나의 구간으로 통합하였다.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가구 연체 위험 스트레스 테스트[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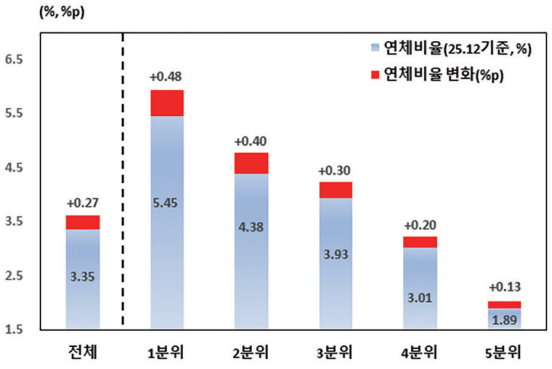
16. **본 절에서는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연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우선 금리가 25bp 상승하는 통상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전반적인 연체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금리가 100bp 상승하는 高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주택 취득 시 대규모 차입으로 인해 금리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구군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추가 점검하였다.

17. **금리 25bp 상승 시 평균 연체비율은 기존 3.35%에서 0.27%p 상승하는 데 그쳐 그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었으나,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 법인대표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평균 연체비율 상승폭은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2024년의 실제 연체비율 상승폭(0.19%p, [그림 17] 참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연체위험의 상승 정도는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림 20]은 25.12월 기준 소득분위별 실제 연체비율과 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분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1 · 2분위 저소득층은 실제 연체비율이 각각 5.45%, 4.38%로 전체 평균(3.35%)을 상회하였으며, 금리 상승 12개월 후 연체비율도 각각 0.48%p, 0.40%p 높아져 타 분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림 21]과 같이, 자영업자 · 법인대표 가구 역시 25.12월 당시 연체비율(4.47%)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 후 변동폭(0.32%p) 또한 여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구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은 〈참고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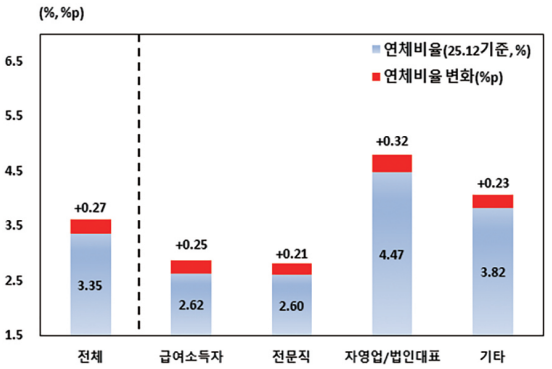
25bp 금리 상승 시 평균 연체비율은 소폭 상승하며, 소득분위 및 가구주 직업군별로 상승폭이 상이

[그림 20] 소득분위별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그림 21] 가구주 직업군별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18. 이어서 금리 100bp 상승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의 금리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규모로 차입한 가구는 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신용위험에 특히 취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2023~25년중 주택자산 평가액이 양(+)의 값으로 전환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가구를 주택취득가구로 식별하였다. 이 가운데 주택 취득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증가분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를 「고차입 주택취득가구」로 분류하였다.[13] 이들 가구의 금리 취약성을 100bp 금리 상승 시나리오 하에서 살펴보았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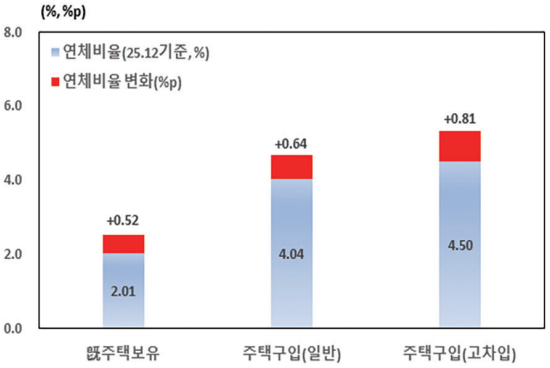
19. 분석 결과, 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12개월 후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의 연체비율이 0.81%p 상승하여 여타 가구보다 금리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전체 주택보유가구의 평균적인 연체비율 상승폭(0.56%p)을 웃도는 수준이며, 같은 기간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가구(0.52%p)와 주택을 취득했으나 과도한 부채조달을 동반하지 않은 가구(0.64%p)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그림 22).[16] 아울러 2022년 금리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2023년의 실제 연체비율 상승폭(0.55%p, [그림 17] 참고)과 비교하여도,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의 0.81%p 연체비율 상승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차입 주택취득

13) 주택취득 과정에서 가계는 자신들이 보유한 유동성을 먼저 소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구 DB에는 금융자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소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분석은 부채조달 측면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14) 동 분석에서 금리 상승 시나리오를 100bp로 설정한 것은 금리 충격의 크기에 따라 연체위험의 반응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한 것이다.
15) 고차입 주택취득가구 기준을 취득주택가액 대비 총부채 증감으로 적용했을 때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해당 기준 상위 10%를 고차입 주택취득가구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면 연체비율 상승이 0.86%p로 소폭 상향되었다.
16) 참고로 2025.12월 기준 주택보유자 전반의 실제 연체비율은 2.21%이며, 고차입 주택취득가구는 4.5%로 나타났다.

가구의 약 71%가 소득 3분위 이상 중 · 고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17], 이들의 금리 충격에 대한 취약성은 저소득 2분위 가구(0.83%p)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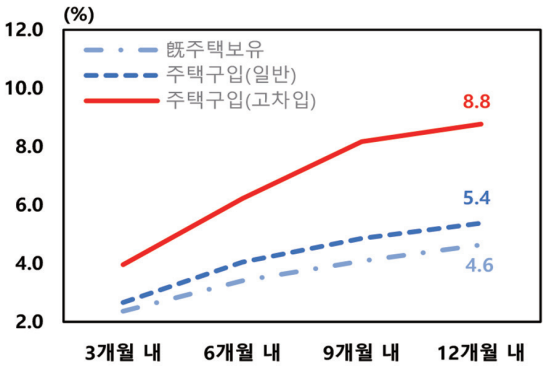
고차입 주택취득가구는 금리 상승에 취약하며, 가구원 간 위험전이 가능성도 큼

[그림 22] 고차입 주택취득가구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그림 23] 고차입 주택취득가구 위험 전이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20.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에서는 한 가구원의 연체가 다른 가구원의 연체로 이어지는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을 위해 2021~23년중 주택을 취득한 가구 중 앞서 정의한 기준을 따라 고차입 주택취득가구를 식별한 후, 해당 가구내 1인 연체 발생 시 3~12개월 내 여타 가구원의 추가 연체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19] [그림 23]은 고차입 주택취득가구내 가구원 1인 연체 발생 후 수개월 내에 다른 가구원이 추가로 연체할 가능성이 여타 가구에 비해 큰 것을 보여준다. 12개월 이내 추가 연체 가능성은 기존 주택보유가구 4.6%, 일반 주택취득가구 5.4%에 비해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에서는 8.8%로 나타나, 기존 주택보유가구의 약 1.9배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차입이 가구원 일부의 연체위험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가구원 전체의 신용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17) 고차입 주택취득가구 중 소득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11.5%, 17.1%에 불과한 반면, 3~5분위는 각각 20.4%, 26.3%, 24.7%를 차지한다. 이는 일반 주택구입가구 및 주택 보유가구와 유사한 수준이다.

18) 고차입 주택취득가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비교 · 평가하기 위해, 주택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 가구주 직업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참고 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19) 동 분석은 대출채무를 가진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구 중 2021~2024년중 가구원 1인의 최초 연체사건 발생을 조건으로 했을 때, m개월 이내 여타 가구원의 추가 연체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V.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제약

21. 본 장에서는 가구DB를 이용하여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임계점을 추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소비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비중을 시산한다. 이는 차입이 과도해지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높여 가계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나승호 외, 2013).[20] 본 분석의 차별점은 자가 기입한 서베이 정보에 의존했던 기존 분석과는 달리 정확도가 높은 신용정보자료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베이 자료와 행정자료를 비교해보면, 서베이 자료에서 부채가 축소보고 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최상위 소득층이 아닌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Madeira, 2025). 따라서 나승호 외(2013), Choi & Son(2016), 박경훈 외(2022) 등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기존 국내 연구들은 부채의 과소보고로 인해 소비제약 임계점이 실제보다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가구DB는 대규모 표본을 이용하면서도 표본 유지율이 약 95%에 달해, 표본 탈락(attrition)에 따른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완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집단의 소비-부채 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임계점을 더욱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5] 소비제약 가계부채 임계점 관련 선행연구

저자 (발행연도)	분석대상	주요 내용
나승호 외(2013, BOK 경제리뷰)	• 가구(한국, 한국노동패널)	• 소득대비 부채비율 1.8~2.2 수준에서 소비제약 임계점 형성
Choi & Son (2016, EB)	• 가구(한국, 한국노동패널)	• 소득대비 부채비율 2.1 혹은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0.27 수준에서 소비제약 임계점 형성
Lombardi et al. (2017, BIS WP)	• 54개국 국가 패널자료	• 가계부채/GDP 비중이 60%를 초과하면 장기 소비에 대한 부정적 효과 강화
박경훈 외(2022, BOK 이슈노트)	• 가구(한국,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0.35~0.40 수준에서 소비제약 임계점 형성
Du Caju et al. (2023, REH)	• 가구(벨기에, HFC 서베이)	•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0.3 이상이면 소비가 크게 감소
Norges Bank (2025, Financial Stability Report)	• 가구(노르웨이, 행정자료)	• 고DTI 가구(>2.14)가 2023년 금리 인상기 당시 소비를 가장 크게 줄임

20) 가계부채는 소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선행연구는 보이고 있다(황인도 외, 2025).

22. 소비함수 추정 결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소득의 46%를 초과하기 시작하는 경우 가계 소비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비함수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1]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다.

$$lnC_{i,t} = \alpha_i + \beta_t + \gamma_1 RDSR_{i,t-1} + \gamma_2 RDSR^2_{i,t-1} + \Phi X_{i,t} + \epsilon_{i,t}$$

위 식에서 종속변수 $C_{i,t}$는 가계소비지출의 대리변수인 가구 i의 t년도 카드사용액을 의미한다. 주요 설명변수인 $RDSR_{i,t-1}$은 가구 i의 $t-1$년도 소득대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낸다. 가계소비는 잠재적인 원리금 상환부담보다는 실제로 발생한 원리금 지출과 이에 따른 가용 현금흐름 감소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액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동 변수의 2차항을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X_{i,t}$는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통제변수로, log 가구소득, 가구 자산증가율, 가구주 나이, 연령대별 가구 구성원 수, 거주지, 급여소득자 수 및 자영업자 수를 의미한다. 또한 α_i는 관측되지 않는 가구 특성을 나타내며, 매년도 가구에 공통으로 발생한 충격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 고정효과(β_t)를 포함하였다. 분석기간은 2019~2025년이며, 가구 단위로 10%를 무작위 추출한 후, 해당 가구에 대한 연도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

추정결과 실제 원리금 상환액 기준 DSR의 1차항은 양(+)의 값, 2차항은 음(−)의 값을 보여, 가계소비지출과 DSR 간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났다(표 6). 이는 낮은 DSR 구간에서는 부채 증가에 따른 유동성 제약 완화로 인해 소비도 증가하다가, DSR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유동성 효과를 압도하면서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가장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열 (3)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DSR이 1%p 상승할 때 가구의 카드사용액은 [0.48−1.04*DSR]%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DSR이 46%[22),23)]를 초과하면 한계효과가 음(−)으로 전환되며, DSR이 상승할수록 소비 감소폭도 확대됨을 알 수 있다.[24)]

---

21) 나승호 외(2013), Choi and Son (2016), 박경훈 외(2022),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 등

22) 소비제약 임계수준은 $r_2 < 0$를 조건으로, $-\frac{r_1}{2r_2}$로 구할 수 있다.

23) 임계수준 46%는 2024.9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추정된 수준(47%)과 유사하며, 박경훈 외(2022)의 추정결과(35~40%) 보다는 큰 수준이다.

24) 한편, 나승호 외(2013) 및 Choi and Son (2016) 등을 참고하여 가계소득 대비 부채잔액 (Loan-to-Income)을 DSR의 대용지표로 활용하여 추정해보았다. DSR을 이용한 추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채변수와 카드사용액 간의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임계치는 통제변수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졌으며, 4.6~6.7 사이로 형성되었다. 또한 DSR과 함께 추정하는 경우 그 통계적 유의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는 〈참고 3〉에 제시하였다.

23. 소비제약 DSR 임계치(0.46)를 상회하는 가구는 2025년 기준 부채보유가구의 11.1%이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4]는 가구DB 내 부채보유가구(분석표본 기준) 중 소비제약 DSR 임계치를 상회하는 가구의 비중을 연도-소득분위별로 나타낸 것이다. 2025년 기준 부채보유가구의 11.1%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제약될 수 있는 임계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24년중 경제성장률이 둔화[25]되면서 가계의 소득개선이 정체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상승 국면이 이어지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하면 2025년 임계치 초과가구 비중은 소득 1분위에서 3.1%p 상승하여 여타 소득분위보다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2024년 이후 전체 임계치 초과가구 비중은 소폭 감소한 반면, 소득 1분위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지출여력 저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제약 DSR 임계치는 0.46 수준

[표 6] 가계소비 방정식 추정 결과

종속변수 = log 카드사용액	(1)	(2)	(3)
DSR (t-1)	0.97***	0.48***	0.48***
	(0.02)	(0.02)	(0.02)
DSR^2 (t-1)	-1.16***	-0.50***	-0.52***
	(0.03)	(0.03)	(0.03)
가구 고정효과	O	O	O
연도 고정효과	X	X	O
여타 통제변수	X	O	O
관측치 수	1,123,230	1,123,026	1,123,026
Adj. R^2	0.00	0.38	0.39
DSR 임계점	**0.42**	**0.48**	**0.46**
가구 수	222,892	222,874	222,874

주: ( ) 내는 Robust standard error를 의미.
***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소비제약 임계치 상회 가구는 소득 1분위 중심으로 상승세

[그림 24] 임계치 상회 가구비중 히트 맵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25) 해당 3개년도의 경제성장률 평균은 2.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치인 3.1%(2011-19년 기준, 코로나19로 성장률 등락이 컸던 2020~21년 제외)에 미치지 못하였다.

Ⅵ. 정책적 시사점

24. 이상의 분석결과는 (1)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에 있어 가구 단위 정보의 보완적 활용이 필수적이며, (2)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3)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채무상환부담과 이에 따른 소비여력 제약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25. 먼저 가구 내 소득 · 자산 · 부채의 공유와 신용위험의 연계 등 가구 단위에서만 포착할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차주 단위 분석과 함께 가구 단위 정보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구 단위로 소득 · 자산 · 부채를 함께 고려할 경우 가구 전체의 상환능력과 담보여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분석단위에 따라 계층별 부채위험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간 대출이 분산되어 있고 한 가구원의 연체가 다른 가구원의 신용도와 연체위험과도 연계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취약성 평가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가구 전체의 재무여건과 가구원 간 위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6. 아울러 고차입 주택취득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 단위 분석 결과 고차입 주택취득가구는 중 ·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편임에도 주택취득 과정에서 부채를 크게 확대한 영향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연체위험이 여타 주택취득가구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차입 주택취득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부실화될 경우 여타 가구원으로 신용위험이 확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가구의 부실위험이 여타 부문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27. 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상승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주택 취득에 필요한 차입규모도 함께 늘어나 가계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실제 주택가격과 신용 확대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26], 기대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식시장 차익실현 자금유입 등으로 이러한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6), 거시건전성정책 등 여타 정책 또한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조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26) Kim et al. (2026)에 따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 1표준편차 상방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 주택가격은 약 6개월 후 0.4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또한 가계부채 원리금상환부담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앞선 분석에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임계점(0.46)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소비지출이 제약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계점을 상회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소득 1분위의 경우 전체적인 흐름과 달리 2025년중 임계점 이상 가구 비중이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리 상승 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부담과 재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취약가구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선별적인 정책지원도 검토하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 1〉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본고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은 Dirma & Karmelavičius (2025) 및 IMF (2024, 2025, 2026) 등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방법과 유사하다. 먼저 가구DB를 이용하여 다음의 연체 예측모형을 추정한다.

$$Pr(y_{i,t}=1)=\Lambda\left[\beta_0+\beta_1\overline{LTV_{i,t}}+\beta_2\overline{DSR_{i,t}}+X_{i,t}^{'}\gamma+Z_{t-1}^{'}\delta\right]$$

추정모형 설정은 O'Toole and Slaymaker (2021) 및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4) 등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위 식에서 종속변수 $y_{i,t}$는 가구 i가 t월에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Lambda(\cdot)$는 로지스틱 누적분포함수($\frac{e^z}{(1+e^z)}$)를 의미한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직전 6개월 LTV와 DSR 평균을 이용하였다. $X_{i,t}$는 가구주 직업, 가구주 나이, 수도권 거주 여부, 가구원 수, 가구소득 분위 및 월별 가구소득 등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아울러 가구연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직전 3개월 기준금리[27] 및 경기동행지수 수준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2019~2025년이며, DB에서 가구 단위로 10%를 무작위 추출한 후, 해당 가구에 대한 월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추정을 실시하였다. 추정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가계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연체확률이 상승하는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7] 연체 예측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 연체더미	(1)	(2)	(3)	(4)
	주택 보유			주택 미보유
DSR	0.011***		0.010***	0.007***
	(0.000)		(0.000)	(0.000)
LTV		0.005***	0.001***	
		(0.000)	(0.000)	
가구주 나이(40, 50대)	0.018***	0.008**	0.020**	0.341***
	(0.004)	(0.004)	(0.008)	(0.007)
가구주 나이(60대 이상)	−0.358***	−0.368***	−0.354***	−0.066***
	(0.005)	(0.005)	(0.011)	(0.010)
수도권 거주 여부	−0.328***	−0.259***	−0.313***	−0.313***
	(0.003)	(0.003)	(0.007)	(0.006)
가구주 직업(전문직)	−0.218***	−0.217***	−0.221***	−0.047
	(0.015)	(0.015)	(0.030)	(0.034)
가구주 직업(자영업자/법인대표)	0.212***	0.262***	0.210***	0.163***
	(0.003)	(0.003)	(0.007)	(0.007)
가구주 직업(기타)	−0.018***	0.004	−0.017	−0.022**
	(0.005)	(0.005)	(0.010)	(0.009)
가구주 성별(여성)	−0.163***	−0.123***	−0.159***	−0.404***

27) 기준금리 수준은 가계 재무건전성지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편, 대출 연장 · 차환 및 추가 차입 여건, 금융자산 보유 및 유동성 관리 유인 등 재무건전성 지표로 포착되지 않는 금융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공통적인 금리환경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종속변수 = 연체더미	(1)	(2)	(3)	(4)
	주택 보유			주택 미보유
	(0.003)	(0.003)	(0.007)	(0.007)
가구소득 2분위	−0.137***	−0.180***	−0.142***	−0.383***
	(0.007)	(0.007)	(0.018)	(0.010)
가구소득 3분위	−0.414***	−0.467***	−0.421***	−0.732***
	(0.007)	(0.007)	(0.017)	(0.010)
가구소득 4분위	−0.878***	−0.930***	−0.886***	−1.145***
	(0.007)	(0.007)	(0.017)	(0.012)
가구소득 5분위	−1.435***	−1.492***	−1.447***	−1.455***
	(0.007)	(0.007)	(0.018)	(0.014)
가구원 수	0.520***	0.499***	0.523***	0.300***
	(0.001)	(0.001)	(0.003)	(0.003)
기준금리(t−1)	−0.166***	−0.170***	−0.166***	−0.085***
	(0.012)	(0.012)	(0.026)	(0.025)
기준금리(t−2)	0.007	0.018	0.008	0.008
	(0.016)	(0.016)	(0.035)	(0.035)
기준금리(t−3)	0.311***	0.319***	0.313***	0.191***
	(0.011)	(0.011)	(0.025)	(0.024)
경기동행지수(t−1)	−0.044***	−0.044***	−0.044***	−0.029**
	(0.006)	(0.006)	(0.012)	(0.012)
경기동행지수(t−2)	0.060***	0.056***	0.060***	0.040**
	(0.009)	(0.009)	(0.020)	(0.020)
경기동행지수(t−3)	−0.078***	−0.076***	−0.079***	−0.047***
	(0.006)	(0.006)	(0.012)	(0.012)
관측치 수	6,068,279	6,070,863	6,065,891	3,101,233

주: ( ) 내는 Robust standard error 의미. ***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이후 추정 모형(표 7의 열(3, 4))을 이용해 baseline scenario (2025.12월 당시 가구 재무건전성지표 및 기준금리 등이 유지된다고 가정) 하에서 가구별 연체확률($\hat{p}_{base}$)을 계산한다. 또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금리 상승 및 DSR · LTV 변화를 반영하여 시나리오 발생 12개월 후 가구별 연체확률($\hat{p}_{stress}$)을 구한다. 각 시나리오 하에서 산출된 가구별 예측 연체확률을 전체 가구 또는 분석대상 그룹별로 평균한 후, 양 시나리오 간 차이를 금리상승 충격에 따른 연체확률 상승분으로 해석한다.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DSR과 LTV는 가구별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산하였다.

Ⅰ. DSR

① 기준금리 변화가 업권−대출종류를 조합한 16개 대출금리(예: 은행권−주택담보대출, 상호금융−신용대출 등)에 전가되는 정도를 추정한 후, 금리 상승에 따른 월별 대출금리 경로를 생성

− 기준금리 ωbp 상승 이후 대출금리 k의 m개월 뒤 금리 수준은 $\hat{r}_{k,t+m} = r_{k,t-1} + \sum_{j=0}^{m} \hat{\beta}_{k,j} \times \frac{\omega}{100}$ 으로 추정. 여기서 $r_{k,t-1}$는 기준금리 상승 직전의 금리 실측치이고,

$\hat{\beta}_{k,j}$는 $\Delta r_{k,t} = \alpha_k + \sum_{h=0}^{12} \beta_{k,h} \Delta r_{t-h} + \epsilon_{k,t}$ 에서 추정된 계수

② 각 개인(차주)의 금리 상승 전 부채잔액에 ①에서 추정한 대출종류별 금리 경로를 적용하여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의 개인별 원리금 상환부담 금액을 시산

③ 개인별 추정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구단위로 합산한 후 가구소득으로 나누어 DSR 산출. 단, 가구소득은 금리상승 전과 동일하다고 가정

Ⅱ. LTV

① 장민(2026)을 참고하여 ωbp 금리 상승이 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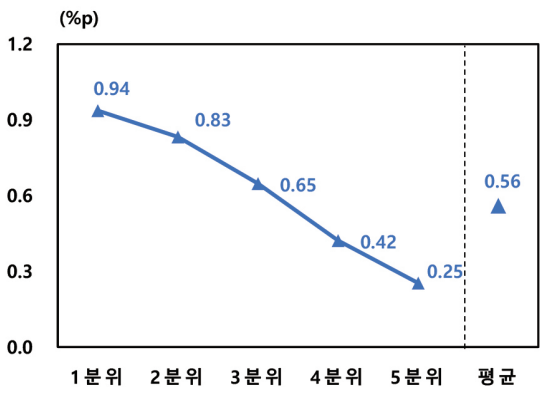
② 가구 주소지(현재 거주지 기준) 주택가격에 ①을 반영하여 주택가격 변화를 시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구별 LTV를 재산출

〈참고 2〉

추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주택보유가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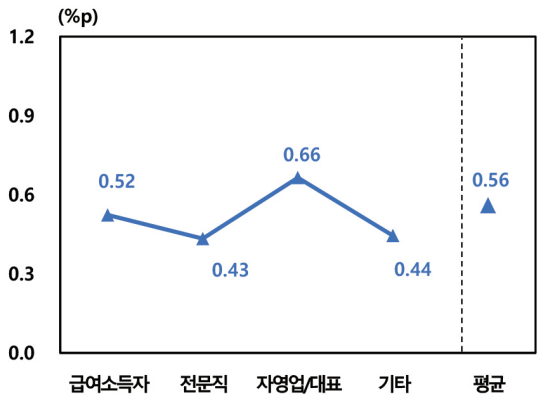
참고 지표로서 금리 100bp 상승 시 소득분위별, 가구주 직업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확률 상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직업이 자영업자 및 법인대표인 경우 평균에 비해 연체확률이 더 높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저소득층,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영업자 가구가 금리 상승 충격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그림 25] 소득분위별 스트레스 테스트



주: 기준금리 100bp 상승 시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그림 26] 가구주 직업별 스트레스 테스트



주: 기준금리 100bp 상승 시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참고 3〉

소비제약 임계점 추정

[표 8] 소비함수 추정 결과

종속변수 = log (카드사용액)	(1)	(2)	(3)	(4)	(5)	(6)	(7)
DSR (t−1)	0.97***	0.48***	0.48***				0.42***
	(0.02)	(0.02)	(0.02)				(0.02)
DSR^2 (t−1)	−1.16***	−0.50***	−0.52***				−0.46***
	(0.03)	(0.03)	(0.03)				(0.03)
LTI (t−1)				0.09***	0.03***	0.03***	0.01***
				(0.00)	(0.00)	(0.00)	(0.00)
LTI^2 (t−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log (소득)		1.10***	1.06***		1.10***	1.05***	1.05***
		(0.00)	(0.00)		(0.00)	(0.00)	(0.00)
자산가치 상승률		0.03***	0.04***		0.03***	0.04***	0.04***
		(0.00)	(0.00)		(0.00)	(0.00)	(0.00)
가구주 나이(40, 50대)		−0.04***	−0.04***		−0.04***	−0.04***	−0.04***
		(0.00)	(0.00)		(0.00)	(0.00)	(0.00)
가구주 나이(60대 이상)		−0.08***	−0.11***		−0.08***	−0.11***	−0.11***
		(0.00)	(0.00)		(0.00)	(0.00)	(0.00)
급여소득자 수		0.03***	0.03***		0.03***	0.03***	0.03***
		(0.00)	(0.00)		(0.00)	(0.00)	(0.00)
자영업자 수		0.10***	0.08***		0.10***	0.08***	0.08***
		(0.00)	(0.00)		(0.00)	(0.00)	(0.00)
20대 가구원 수		0.01***	0.05***		0.01***	0.05***	0.05***
		(0.00)	(0.00)		(0.00)	(0.00)	(0.00)
30대 가구원 수		0.01***	0.04***		0.01***	0.04***	0.04***
		(0.00)	(0.00)		(0.00)	(0.00)	(0.00)
40대 가구원 수		0.02***	0.04***		0.02***	0.04***	0.04***
		(0.00)	(0.00)		(0.00)	(0.00)	(0.00)
50대 가구원 수		−0.02***	−0.02***		−0.02***	−0.02***	−0.02***
		(0.00)	(0.00)		(0.00)	(0.00)	(0.00)
60대 가구원 수		−0.00	−0.03***		−0.00	−0.03***	−0.03***
		(0.00)	(0.00)		(0.00)	(0.00)	(0.00)
수도권 거주 여부		0.01*	0.00		0.01*	0.00	0.00
		(0.01)	(0.01)		(0.01)	(0.01)	(0.01)
2021년 연도 더미			0.04***			0.04***	0.04***
			(0.00)			(0.00)	(0.00)
2022년 연도 더미			0.12***			0.12***	0.12***
			(0.00)			(0.00)	(0.00)
2023년 연도 더미			0.17***			0.17***	0.17***
			(0.00)			(0.00)	(0.00)
2024년 연도 더미			0.19***			0.19***	0.19***
			(0.00)			(0.00)	(0.00)
2025년 연도 더미			0.19***			0.19***	0.19***
			(0.00)			(0.00)	(0.00)
관측치 수	1,123,230	1,123,026	1,123,026	1,123,230	1,123,026	1,123,026	1,123,026
Adj. R^2	0.00	0.38	0.39	0.00	0.38	0.39	0.39
LTI 임계점	–	–	–	4.67	6.15	6.64	11.65
DSR 임계점	0.42	0.48	0.46	–	–	–	0.45
가구 수	222,892	222,874	222,874	222,892	222,874	222,874	222,874

주: ( ) 내는 Robust standard error 의미. ***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가구DB(자체 시산)

〈참고문헌〉

김영일, 유주희. (2013).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가구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19(2), 59–95.

김영일. (2023).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한국경제포럼, 16(1), 1–37.

나승호, 정천수, 임준혁. (2013),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BOK경제리뷰」, 한국은행, 2013.3월

박경훈, 곽법준, 남석모, 박상우, 이광원, 남명훈, 이은송, 이재운, 황나윤. (2022),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BOK 이슈노트 제2022–27호, 한국은행

장민. (2026). 통화정책이 지역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금융브리프, 35(7),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석. (2025). 영끌현상 특징과 시사점. 금융브리프, 34(7), 한국금융연구원.

정호성. (2018).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제2018–5호.

한국은행. (2021). 금융안정보고서, 2021년 12월.

한국은행. (2023). 금융안정보고서, 2023년 12월.

한국은행. (2024).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4년 9월.

한국은행. (2024). 금융안정보고서, 2024년 12월.

한국은행. (2025). 금융안정보고서, 2025년 12월.

한국은행. (2026). 금융안정상황, 2026년 3월.

한국은행. (2026). 금융안정보고서, 2026년 6월.

황인도, 장훈, 김우석 (2025),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BOK 이슈노트 제2025–37호.

Athreya, K., Sánchez, J. M., Tam, X. S., & Young, E. R. (2018). Bankruptcy and delinquency in a model of unsecured debt.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59(2), 593-623.

Barbaglia, L., Manzan, S., & Tosetti, E. (2023). Forecasting loan default in Europe with machine learn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etrics, 21(2), 569–596.

Choi, Y., & Son, J. C. (2016). Nonlinear effect of household debt on consumption: Evidence from household-level panel data in Korea. Economics Bulletin, 36(2), 1083–1094.

Dirma, M., & Karmelavičius, J. (2025). Micro-assessment of macroprudential borrower-based measur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76, 107455.

Du Caju, P., Périlleux, G., Rycx, F., & Tojerow, I. (2023). A bigger house at the cost of an empty stomach? The effect of households' indebtedness on their consumption: Micro-evidence using Belgian HFCS data.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21(1), 291-333.

Gerardi, K., Herkenhoff, K. F., Ohanian, L. E., & Willen, P. S. (2018). Can't pay or won't pay? Unemployment, negative equity, and strategic default.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1(3), 1098-113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4). Japan: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Technical Note on Systemic Risk Analysis and Stress Testing. IMF Country Report No. 24/11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5).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Technical Note on Climate Risk Analysis. IMF Country Report No. 25/30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6). Greec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Technical Note on Systemic Risk Analysis. IMF Country Report No. 26/143.

Kelly, R., & O'Toole, C. (2018). Mortgage default, lending conditions and macroprudential policy: Loan-level evidence from UK buy-to-lets.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36, 322–335.

Kim, W., Hwang, I. D., & Lee, J. W. (2026). Housing price expectations and the macroeconomy: Evidence from Korea's housing-centric economy. The Korean Economic Review, 42(2), 335-370.

Lee, D., & van der Klaauw, W (2010). An Introduction to the FRBNY Consumer Credit Panel,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s.

Low, D. (2026). What triggers mortgage default? New evidence from linked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8(1), 282–290.

Lombardi, M. J., Mohanty, M. S., & Shim, I. (2017). The real effects of household debt in the short and long run. BIS Working Papers No. 607,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Madeira, C. (2025). How accurately do consumers report their debts in household surveys? BIS Working Papers No. 1258,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Meriküll, J., & Rõõm, T. (2020). Stress tests of the household sector using microdata from survey and administrative sou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16(2), 203-248.

Norges Bank. (2025).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5 H2. Norges Bank.

O'Toole, C., & Slaymaker, R. (2021). Repayment capacity, debt service ratios and mortgage default: An exploration in crisis and non-crisis period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33, 106271.

Stanga, I., Vlahu, R., & de Haan, J. (2020). Mortgage arrears, regulation and institutions: Cross-country evidenc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18, 105889.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2026-23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53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